

北方政策의 虛와 實

李 基 榮

〈現代經濟社會研究院 地域研究室長·經博〉

1. 머리말

작년 한해 우리 정부는 헝가리를 시작으로 東歐의 거의 모든 나라와 국교를 수립하였다. 지난 6월에는 韓蘇頂上會談이 있었으며 최근 修交協議次 소련을 방문한 우리정부 대표단이나 예레멘코 駐韓蘇聯領事處長은 조만간 국교 수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87년 對北方國家 수출은 10억2,600만불, 수입은 10억6,200만불로 총 20억8,800만불에 달했다. 88년에는 수출이 20억100만불, 수입이 16억7,000만불로 87년보다 75.8%가 늘어난 36억7,100만불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지난 해 89년에는 수출이 19억6,100만불, 수입이 22억5,900만불로 88년보다 14.9%가 늘어난 42억1,900만불을 기록하는 急伸張勢를 보여 주었다. 이미 1,000억불 수준을 훨씬 넘어선 우리의 貿易規模에 비해 42억불의 交易量이란 사실 대단한게 될 수 없지만 交易規模面에서 볼 때 미국, 일본, EC에 이어 네번째란 사실은 이들 북방국가의 중요성을 단적으로 보여 준다 할 수 있다.

國際民間經濟協議會의 발표에 의하면 89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를 찾아온 소련, 중국, 동구 등 북방국가 사람들은 1만5,347명이었으며 북방국가를 방문한 한국인은 1만4,175명이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지난 87년 한해 동안 있었던 북방국가들과의 人的交流 2,477명에 비하면 2년 사이에 무려 11배가

늘어난 것이다. 사람들의 왕래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대한 북방국가들의 관심고조와 우리의 이른바 '북방러시'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 할 것이다.

이같은 놀라운 발전에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우리가 쏟아낸 열기와 관심에 비한다면 이 정도의 결과는 예상을 밑도는 별로 신통치 않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있다. 가령 75.8%, 14.9%라는 지난 2년의 貿易伸張率도 몇 년전 이들과 교역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시절을 감안한다면 비율 그 자체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89년에는 소규모지만 2억9,000만불 정도의 貿易赤字를 기록했다는 사실도 대단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실망을 줄 뿐이라는 것이다. 더욱이 이같은 적자 추세는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시바빠 북방 열기의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소련의 수입대금 결제의 지연은 더욱 북방 열기의 위험성을 고조시키고 있으며 북방교역과 나아가 북방정책 추진의 전반을 놓고 懷疑를 제기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앞뒤를 제대로 재지 않는 신속한 추진이 가져올 수 있는 졸속 즉 섣불리 서두르다 손실을 자초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그것이다.

특히 북방 교역액 42억1,900만불 가운데서 중국과의 교역 규모가 31억4,200만불로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共產圈에 대한 投資進出 52건 가운데서도 중국에 대한 투자진출이 47건으로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균형을 상실한 交易構造도 문제로 지적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북방 교역은 市場多邊化의 필요성, 原資材의 안정적 확보 그리고 EC 단일시장에 대비한 전진기지 역할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소련, 동구와의 교역과 투자 진출이 미미하다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북방 교역이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제기된다고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해온 북방정책의 실질적인 목적과 동기를 보면 첫째, 국제정치적 측면에서 한반도를 둘러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호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緊張緩和과 더불어 평화적 통일 기반을 마련하고 둘째, 경제적으로는 우리와 북방국가 사이에 존재하는 補完的 구조를 강화함으로써 보다 신속된 상호 이익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의 조정, 경제 협력, 시장다변화를 꾀하고 셋째, 외교적으로는 未修交 사회주의 국가와의 관계개선을 통해 冷戰의 이데올로기를 탈피함으로써 자주적인 開放外交라는 세계전략을 추구한다는 것이었다.

즉 북방정책은 단순히 경제관계의 심화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외교 나아가 우리의 統一戰略의 일환으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바로 앞에 제기된 경제적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북방정책은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은 상당히 단편적인 발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방정책의 허실은 북방정책이 갖는 목적과 동기의 연장선상에서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북방국가에의 진출에 있어 수반되는 위험들의 대부분이 북방국가 자신의 위기적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북방국가의 현실도 아울러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바로 이같은 맥락에서 북방정책의 허와 실 또는 득과 실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2. 北方國家의 現況

북방정책의 추진 대상인 북방국가의 현실은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면에서 매우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다. 북방국가 특히 소련, 동구의 경제는 70년대부터 구조적으로 그 효율성이 떨어지

면서 經濟沈滯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80년대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다. 86~89년 소련의 평균 경제 성장률은 3.7%로 목표치 4.5%를 훨씬 미달했으며 특히 경제 난국의 核心要因이라 할 수 있는 消費財 공급부족 현상은 전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당내 보수 진영의 강력한 반발을 억제하면서 지속적인 개혁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는 힘은 광범위한 대중적 기반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生必需品를 비롯한 소비재 부족은 국민들의 불만을 더욱 크게 하고 있다. 따라서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의 주요 政策目標로 소비재 생산을 내세우고 있으며 실제 지난 해 소비재 생산증대는 5.9%(주류제외)를 달성하여 목표선 10%에는 훨씬 못미치기는 하지만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다. 소비재 공급도 비디오(71%), 酒類(19%), 설탕(11%), 비누(10%) 등 특정 품목만 증가하고 섬유, 의류, 신발, 육류, 음료 등 생필품 공급은 정체내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같은 만성적이고 전반적인 소비재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소련은 지난 해 753억불 상당의 소비재를 수입했다.

한편 소비재의 공급 부족은 사회적 불만뿐만 아니라 물가상승의 핵심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소위 “육구 억제형 인플레이션”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정체와 소비재 부족 그리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불만의 누적은 동구제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작년에 비해 상당히 鎮靜되었다고는 하나 이들에게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자신들을 괴롭히는 골치거리의 하나이다. 특히 일부 국가에서 개혁의 일환으로 시도된 농산품에 지급되던 보조금의 철폐와 이에 따른 식품가격의 폭등은 이들 사회에 극도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작년 8월 1일 실시되었던 폴란드의 농산물 가격자유화는 800%라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였으며 지난 5월 실시한 소련에서의 가격 자유화도 사재기와 함께 엄청난 물가폭등이라는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가져왔다.

북방국가의 또 다른 심각한 문제로 실업을 들 수 있다. 실업은 이들의 낮은 生産性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영의 합리화, 獨立採算制를 강화함에 따라 기업의 파산과 더불어 급격히 늘어날 전망

이다. 폴란드의 경우 실업은 이미 100만명을 넘어섰으며 연말까지 150만명 수준에 이르리라 예상되고 있다. 동독도 150만명을 넘어섰고 소련은 이 숫자를 이미 1988년에 넘어섰다.

소련과 동구에서의 실업은 소비재 부족현상에 따른 사회적 불만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며 또한 심각한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갖게 한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서 갖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실업인구가 이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다. 실제 개혁이 진행되면 될수록 생산성이나 採算性이 없는 기업의 倒産이 증가할 것이고 이는 결국 실업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구제를 위한 대대적인 公共投資事業의 전개 역시 어려운 실정이다. 왜냐하면 공공사업의 실시는 당장 눈앞의 실업을 감소시킬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불씨인 通貨膨脹과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라는 풀기 어려운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들에게 대규모 공공사업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자본의 여력이 없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한편 이들을 괴롭히는 경제문제로 財政赤字를 들 수 있다. 여기엔 무역수지의 악화는 물론 예산적자도 포함된다. 실제 外債의 누적과 硬貨의 부족은 무역대금의 결제까지도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심각한 財政難을 가져 왔다. 따라서 최근 예산에 의해 지원되어 왔던 제반분야에서의 정부보조금의 삭감이나 철폐는 이같은 구조적인 경제 위기의 맥을 끊으려는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안으면서도 식품이나 소비재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하고 가격 자유화를 시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될 수 있는 苦肉策의 하나라 할 수 있다.

북방국가들이 안고 있는 경제적인 위기는 이들로 하여금 과감하고 급격한 경제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 모든 나라에서는 경제의 안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경제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예산의 삭감, 보조금의 철폐, 가격자유화, 兌換性 부여, 높은 이윤이 보장되는 사업으로의 자원의 이동 등이 바로 안정화 정책의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한편 경제의 안정화와 함께 경제의 자유화를 위한 조치들도 병행되고 있다. 여기서 경제의 자유화란 첫째로 가격, 임금, 이자율, 환율 등 시장 경제의 형성과 작동을 방해하는 제반요소의 제거를 말한다. 둘째는 토지나 주택, 固定資産 등의 매각을 금지하는 경제활동에 제한을 가져오는 제반 규제 행위들의 제거나 재검토를 의미한다. 셋째, 지금까지 獨占的 기구에 의해 운영되어 왔던 제반 경제행위 대신 경쟁체제에 입각한 새로운 규범이 정착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노동 및 자본 시장, 반독점기관의 형성에 焦點을 맞추어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자유화는 국가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제반조치를 말한다. 또한 중앙이나 지방 행정조직의 관료주의적 성격을 배제하는 것도 자유화의 개념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의 자유화와 안정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도 포함된다. 아파트, 토지, 상점, 공업 플랜트 등의 私有化는 물론 국가세입과 지출에 있어 정부에



산의 분배는 지방예산에 우선권을 주고 엄격한 재정 정책을 적용한다. 임금을 凍結함으로써 물가인상 요인을 사전 억제하며 수입을 자유화함으로써 물자의 부족을 메꾸고 이 수입상품을 국제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한 硬貨로 판매한다. 外債의 극복을 위해 긴축정책을 실시하며 수출주도형 발전정책을 보다 과감히 추진하고 채권국과 채무상환 연기, 이자율과 상환해야 할 채무의 경감을 위한 협상, 서방과의 교역조건의 개선, 현대화와 수출촉진에 관련된 프로젝트의 개발과 외국 투자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실시한다.

3. 北方政策의 虛實

1) 概 況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문제로 삼아야 할 부분은 이같은 개혁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지적했던 경제적 문제와 위기상황이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달리말해 우리의 대북방국가 진출이나 經協의 일차적인 장애는 우리 자신의 미숙에 있다 기보다는 그들이 처한 경제적 위기가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이다.

북방정책의 허실을 논할 때 다음으로 고려되어야 할 점은 국제정치 차원에서의 得失일 것이다. 이미 밝혔듯이 우리 북방정책의 목적 중에는 평화적 통일을 위한 국제적 환경조성이 있다.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조성에는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이 일차적으로 요구된다 할 수 있다. 사실 소련과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이 두나라가 한반도 긴장완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당사국들이기도 하며 남북한의 관계개선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지적해야 할 것은 韓·蘇關係나 韓·中國關係의 정상화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에 順機能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으나 그것이 곧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서울 - 모스크바간 관계개선이 서울 - 평양간 관계개선으로 곧 바로 연결된다는 등식도 부정할 수 없지만 역시 많은 의문점이 제기된다 할 수 있다. 즉 韓·蘇 修交가 소련 - 북한간 군사 동맹관계를 대체할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우리와 북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이 한미 동맹관계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2) 政治的 側面

이같은 현실 인식하에 첫번째 국제정치 차원의 得은 앞서 말한 바처럼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즉 평화구조가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남북한의 통일 논의를 보다 가능성 있는 형태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 둘째는 과거 冷戰的 兩極論理와 체제에서 벗어나 균형적인 논리와 사고방식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이는 국내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의 정립을 가져왔으며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 일변도의 편향적인 외교가 가져다 준 정치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였다. 세번째 득은 보다 유연성 있는 정책의 수립을 가능케 했다는 점이다. 이를테면 미국, 일본과 북한의 관계 개선을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관계개선을 앞선해 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점은 향후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매우 肯定的인 자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북방정책의 可視的이고 실질적인 성과로서 의미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과거 우리와 적대관계에 있던 소련, 동구 및 중국으로부터도 이제는 우리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반면 국제정치적 차원에서의 失이라면 첫째, 북한의 상대적인 고립화를 들 수 있다. 이미 우리와 동구와의 수교 과정에서 볼 수 있었던듯이 북한의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반응은 결코 통일에 보탬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북방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우리가 필히 앞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북한의 외교적 孤立感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아울러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두번째 제기될 수 있는 失은 북방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주변의 강대국들이 두개의 한국카드를 이용할 경우가 과거보다 더욱 높아졌으며 우리의 통일을 우려의 눈으로 보려는 주변 강대국들의 관심이 집중되는데 따라 발생하는 외교적 부담과 견제가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3) 經濟的 側面

경제적 차원에서 북방정책의 得失을 보면 失보다는 得이 더 많다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得은 첫째, 새로운 시장으로서의 가치이다. 둘째는 수출선의 다변화를 들 수 있으며 세번째는 우리에게 부족한 資源의 조달이라는 차원에서 得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들 북방국가에 갖는 의미는 보다 근본적으로 산업구조의 조정시 요구되는 적절한 배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들 지역에 존재하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값싼 勞動力의 존재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우리나라의 勞動集約의 산업의 移轉地域으로 그 가치와 가능성을 충분히 안고 있다 할 것이다. 즉 지금까지 外延의 성장 - 勞動의 量과 시간의 증대를 통한 성장 - 에 限界를 안게 된 우리로서는 이들 지역이 매우 유리한 산업구조 조정의 파트너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우리와 이미 많은 분야에서 경쟁관계에 돌입해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는 달리 산업구조적으로 보완적인 측면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는 유용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構造的인 補完性 다음으로 지적될 수 있는 得은 이들 북방국가들이 갖고 있는 경제지리적 위치에서 오는 전략적 利點이라 할 수 있다. 쉽게 얘기한다면 유럽의 통합에 대비한 전진기지라는 사실이나 동구를 통한 소련시장, 소련을 통한 동구 진출 등 迂迴進出 전략의 要衝地라는 주장들이 그것이다. 특히 장기적으로 동구지역이 EC의 회원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은 더욱 이 지역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또한 북방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이득은 지금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경제권에서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제경제의 불려화 추세에 대응하여 중국, 소련과의 관계개선은 한국, 북경, 동남아로 또 한국, 소련, 극동시베리아, 모스크바, 서구로 이어지는 아시아 태평양의 球心軸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동북아 경제권의 형성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국들이 표명하고 있는 일본에 대한 牽制心理를 감안한다면 더욱 우리의 중심적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다 할 것이다.

반면 이 지역과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失은 우리

자체의 문제보다는 그들이 직면한 경제적 여건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말한 대외무역 결체의 지연과 같은 위험은 당분간 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한 위험을 안고 있다. 낮은 생산성, 훈련된 인력의 부족, 정착되지 않은 시장 질서, 미비한 사회간접 투자 등은 이들과의 협력이 실패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북방국가와 우리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지금의 補完關係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모호한 것이어서 언제 경쟁적으로 변모할지 알 수 없다. 가령 지금은 당장 소비재가 부족하고, 군수산업을 소비재 생산시설로 전환한다지만 이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은 갖기 어렵다. 지금은 당장 補完的 側面이 강하다 하더라도 이들의 役量으로 미루어 경쟁적 입장으로 전환하기란 어렵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는 이미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상품을 더욱 싼 값에 수출할 수 있는 풍부하고 값싼 노동력과 엄청난 자원을 가진 경쟁의 대상이라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경제적 차원에서의 失이란 결국 상대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데 기인하지 추진속도 때문에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直接的인 失보다는 우리의 향후 대응방향일 것이다. 왜냐하면 적절한 대응의 미비는 궁극적으로 손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북방국가의 불확실한 여건 속에서도 이들과의 經協에 있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최근 경향은 첫째, 위험의 분산과 극소화를 위해 다양한 성격의 투자자들이 하나로 결합하는 현상이다. 가령 금융, 무역, 제조, 유통업체간의 결합 다시 말하면 하나의 투자 사업에 은행과 무역회사, 관련산업의 제조회사, 광범위한 판매망을 가진 유통회사가 하나의 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에 관련된 몇몇 異種産業間 合作 - 예를 들면 선박 건조 및 수리산업과 어업의 결합이나 연예 프리덱션과 비디오 기기산업의 합작 등 - 도 최근의 경향이다.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도 出資規模面에서 보면 母會社의 크기와 관계 없이 각 투자자들의 지분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라는 사실도 간과할 수 없는 경향이

다. 그리고 합작을 추진하는 出資者들의 國籍도 갈수록 多國籍化 되고 있다. 다시 말해 다양한 국적을 가진 少額投資者들이 새로운 투자의 흐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단순한 求償貿易 차원의 상품과 상품의 교역은 이제 구태의연한 형태가 되어 버렸다. 자국인의 관광지출 대금을 소비재로 상계한다든가 교역에 따른 대금결제에 상품과 현금, 제3국의 債務 등을 동시에 혼합하는 복합적이면서 다변화된 형태가 최근의 추세이다. 또 技術移轉의 代價를 각종 資源開發利權의 供與로 상쇄하는 방식도 사용되고 있다. 즉 상품과 상품, 상품과 현금의 교환에서 상품과 서비스, 서비스와 서비스의 교환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대규모 신규투자가 요구되는 사업의 개발보다는 기존시설의 근대화를 통해 생산성과 부가 가치를 올려 수익을 확보하려는 신규자금의 소요가 적은 사업의 발굴에 焦點이 모아지고 있다. 또 현지의 값싼 原資材를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모색하려 하며 외국 투자자 자신은 가급적 現金出資 대신 기술, 노하우, 經營技法, 마케팅 등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는 현금투자 기피 현상이 두드러진다.

넷째, 경제협력의 방식과 대상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확대되고 있는 것도 최근의 경향이다. 이를테면 교역과 투자사업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고 있다든가 교통, 통신, 금융 등 서비스분야의 협력증대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에서만 그치지 않고 문화, 관광, 체육, 교육 등 다양한 영역의 요소들이 동시에 포괄적으로 모색되고 있다. 가령 예술이나 스포츠 활동과 관련산업을 연계시키는 방안이나 국제경영학교의 개설을 포함한 경영기법의 傳授나 생산·기술인력의 연수, 장학금의 제공, 유학생의 초청도 장기적 안목에서 역점을 두고 시도되는 중요한 접근전략의 하나이다.

다섯째는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개입이다. 국가 주도하에 설립된 재정기관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된 다거나 공공연구기관의 활동영역이 더욱 커지고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최근 미국의 OPIC(해외투자공사)나 서독의 헤트메스와 같은 재정기관이 제공하는 보험 및 대출기능의 확대나 전문가들을

외교관 신분으로 연구만을 위해 현지국에 파견하는 일본의 예가 그것이다.

이같은 최근의 경제협력 패턴은 우리의 對應戰略형성에 몇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각개 약진형식의 진출은 갈수록 각자의 위험성만 높일 뿐이라는 점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진출 가능성과 폭이 제한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셋째, 장기적 안목에서 현지 인맥의 형성을 위한 간접투자에 인색치 말아야 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넷째, 급변하는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크고 작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는 전문 연구기관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되어야 할 점이 있다면 이 지역의 진출은 단순히 기업 혼자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면밀한 지원이 동시에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공동작업이라는 인식이다.

4. 맺 음 말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북방정책의 득실에 기초한 허와 실의 분석은 궁극적으로 失보다는 得이 많은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북방정책의 得失이나 虛實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의 자로만 잴 수 없으며 이는 정치·외교적 차원과 동시에 특히 통일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한다. 따라서 이같은 맥락에서 다시금 북방정책을 조망해 본다면 서두름에 따른 손실 때문에 정책자체에 異議를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즉 서두름에서 오는 손실의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 하는 微視的 차원 즉 最前線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숙제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앞서 제시된 몇가지 최근 경향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 할 것이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으로 북방정책의 虛實에 대한 진단 판단 기준은 앞서 제기된 정치, 경제, 외교, 통일 등 우리가 추구해야 할 또는 당면한 과제 중에서 무엇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가 하는 민족적 가치의 문제로 귀속된다 할 것이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통일을 그 최우선으로 한다면 다른 차원에서 의 웬만한 손실은 감수해야 할 것이며 달리 경제를 우선시하기로 한다면 지금까지의 접근방식은 처음부터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